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연희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61
----------	------

발의연월일 : 2024. 7. 15.

발 의 자 : 이연희 · 김정호 · 홍기원
이정문 · 이병진 · 정성호
허영 · 허종식 · 박상혁
박홍배 · 한민수 · 박정
한준호 · 문진석 · 서미화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반기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 안전점검 결과 건축물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에 통보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한 다음 해당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 등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명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에 대한 안전조치가 시급한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안전점검 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사전에 보고한 후 조치를 하도록 하는 것은 의사결정 지연으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건축물의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 우려 등으로 신속히 건축물의

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할 수 있도록 하여 입주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제33조제2항 단서 신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건축물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조치가 시급하거나 신속히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3조(안전점검) ① (생 략)	제33조(안전점검) ① (현행과 같 음)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주체는 안전점검의 결과 건축물의 구조·설비의 안전도가 매우 낮아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입주자대표회의(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그 사실을 통보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고, 해당 건축물의 이용 제한 또는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u><단서 신설></u>	② ----- ----- ----- ----- ----- ----- ----- ----- ----- ----- ----- ----- ----- 다만, 건축물 붕괴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조치가 시급하거나 신속히 이용을 제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선제조치를 한 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

③ · ④ (생략)	<u>할 수 있다.</u> ③ · ④ (현행과 같음)
------------	----------------------------------